

1. 목적물의 멸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
2. 무주물 선점, 건물의 신축, 시효취득, 상속 등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본인의 확답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인거절의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
4.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5.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와 다른 점은 그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과가 생긴다는 것에 있다. ()
6.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관하여도 의무부담행위인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
7.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8. 교환, 임대차, 주택분양계약, 저당권설정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 ()
9. 법률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단독행위를 창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10.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중간생략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다. ()
11.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
12.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 급여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3.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乙은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 甲이 그 부동산을 적극 가담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14~16)

14.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15. 乙은 甲과 丙의 매매가 자신의 채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6. 丙이 적극 가담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였고 丁이 그 사실에 대하여 선의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17.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18.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계약이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19. 불공정 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매일정리노트(O, X) 정답

1. (X)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2. (X) 상속은 승계취득으로서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3. (X) 준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4. (X)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이지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이다
5. (O)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생기지만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
6. (O) 타인물건의 매매(채권행위)는 유효이지만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7. (O) 원시적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불능은 유효하다
8. (X)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9. (O)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고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원칙이다
10. (X) 중간생략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약정은 유효하다
11. (X)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불법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무효가 된다
12. (O)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3. (O)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O) 乙은 丙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15. (X)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 (X)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17. (X)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18. (X)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9. (X) 불공정무효는 무효행위의 주인은 적용될 수 없으나 무효행위의 전환의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